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6.

발 의 자 : 최기상 · 백혜련 · 김남국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박주민 · 소병철 · 송기현
신동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2조제2항, 안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).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하여야 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지청”을 “그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고지) ① (생략)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<u>검찰청</u>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2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①·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<u>하여야 한다</u> .	제23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여야 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</u> .
④ (생략)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(피고인을 제외한	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----- ----- -----

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3조(추정보전명령의 집행) ①

· ② (생략)

③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-----.

----- 그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-----.

제43조(추정보전명령의 집행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-----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-----.